

# 제주 잠녀 '입맛대로' 접근에 흔들흔들

조직개편서 축제 확대 등 이유 해녀박물관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해녀 문화 전승·보존 조례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 등 따로국밥

등록 : 2011년 01월 17일 (월) 18:12:17  
최종수정 : 2011년 01월 17일 (월) 18:12:1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소홀로 자칫 세계 유일의 여성 중심 해양문화이자 살아있는 역사인 제주 대표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개관 이후 박물관 운영 조례 등을 통해 관리하던 제주해녀박물관을 해양수산국에 포함시켰다. 해녀박물관이 관할하는 ‘해녀축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 범위가 큰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녀문화의 세계화라는 공약까지 뒷받침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달리 축제에 정책 중심이 쏠리면서 도의 문화 마인드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박물관’이라는 문화 인프라 활용 등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전승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통과 당시 담당부서와 업무 분장 등을 이유로 한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와 해양수산본부 간 떠넘기기로 3년 준비과정보다 더한 진통을 겪었으며 논란 끝에 간신히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정리됐었다.

조례 통과 후 이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해녀박물관이 해양수산국에 맡겨지며 관련 조례 역시 허명의 문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현재 마무리작업 중인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년)상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와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와 ‘해녀문화 전수 조사’와 ‘해녀관련 문화 지방 문화재 지정과 보존’등이 별도 추진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정책 중복과 분산에 따른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용어조차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녀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녀문화 집대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면밀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